

100g당 가격 한눈에...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7일 시행

산업부, 6개월간 시범운영·계도기간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 우선 적용
가격 비교 용이... 물가 안정 기여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 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쿠팡 전경.



네이버배송 포스터

/네이버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업체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 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사과값 잡는다... 농식품부, 생산 10% 확대

수급관리 체계 정비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 대응으로, '착과량' (작물에 맺힌 열매의 양) 끌어올리기 등을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가격지표 개편 등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과 소비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은 유지되고 있지만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생산 목표를 전년도의 44만8000톤(t) 대비 10% 이상 늘린 49만3000t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

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개화량 대비 최종 착과량 목표를 기존 6~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과다 결실에 따른 '해거리' (격년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만 착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저장성이 높은 후지 품종을 중심으로 착과량을 확대하고, 수세(나무자람새) 관리와 영양 관리 등 생육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할한다는 계획이다. 주산지인 경북·경남·충북·전북에는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정부·농진청·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원반을 통해 밀착형 기술지도와 농자재 지원을 실시한다.

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 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약제·영양제 공급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갯벌도 '탄소자산'... 관리 5개년 계획 발표

해수부, 5개 유형의 관리구역 지정
사업 타당성·목표달성 평가제도 도입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및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관리·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블루카본이란 바다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대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받는다.

우선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해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갯골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

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갯벌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관광·교육 콘텐츠를 육성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충남 서천에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실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 /농협중앙회

"농촌 인력난... 농기계은행이 해답"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 정기총회
강호동 농협회장, 사업 확대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전국조합장과 만나 농기계은행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6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기계은행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농기계은행사업이란 농협에서 농기

계를 구입해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말 기준 616개 농협(지역농협 597, 지역축협 14, 품목조합 5)이 참여하고 있다. 농작업대행 면적이 총 171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 현장의 위기상황을 공유했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옆 동네서도 가능

권익위, 사각지대 해소 권고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

국 지방정부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위해 자주 찾는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요금 감면 기준이 없던 일부 지방정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부설주차장에도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교통 거점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에도 다자녀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장거리 이동 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같은 광역 지방정부(시·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 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시·군·구)공영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기 노후보장 연금 '푸른씨앗' 문턱 낮춘다

근로복지공단, 7월부터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

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세종=한용수 기자